

# 탈원전·태양광 시각차 극명... 대폭삭감 vs 증액해야

〈정부〉

〈더민주〉

## 2023 쟁점예산

### 에너지 지원 사업

전력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비중 ↓  
尹 정부,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축소  
야당 반발... 최대 2400억 증액 추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약인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7% 대폭 삭감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 5721억원보다 27.1% 삭감한 4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 용자하거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생산 및 시설자금·운전자금·신산업 용자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년도 예산안에서 농촌태양광 용자액은 357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1억원으로 편성돼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을 분석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사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1년 결산 기준 총 3991억 7800만원을 용자 지원해 356MW(메가와트)의 태양광 설치 신규 설치를 지원했다"며 "태양광 기준으로 2023년에는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이 288MW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진영마다 시각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기치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의지를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신재생

에너지 운영 실태 점검'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에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고 농지 면적이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영에 따라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부품 중 중국산이 많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친중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공약으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 ◆尹 정부 원전 기초 발전량 전망치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3기기를 폐지하고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는 원전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기가와트)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제9차 계획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에서 줄어든다.

반면, 산업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 삭감에 반발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액보다 많은 최대 2400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동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K-배터리기업, 美 IRA 합종연횡 대응... 공급·투자 확대

## 적극적 연합 구축... 규제 공동 대응 광물 공급망 다각화, 생산공장 확장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합종연횡으로 대응하며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배터리 3사 모두 부채가 많은 상태지만 '유럽판 IRA' 법안까지 대응해야 할 상황 속에서 투자를 미루기보다는 각종 규제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연합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저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투자와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RA에 이어 '유럽판 IRA'



SK온 미국 조지아 공장 전경

/SK온

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CRMA)'까지 내년 초 통과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의 공동 시장 규제를 관할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집행

위)는 일찍이 유럽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원료를 '핵심원자재(CRM)'로 지정하 바 있으며, 해당 원자재들은 현재 30여 개에 이른다.

이제까지 집행위가 CRM을 규정하고 공급 리스크를 분석하는 연구만 해 왔다면, 이제는 '내년 1분기 이내로 입

법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배터리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CRMA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IRA와 같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SK온은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4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공장에 SK온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공급 시점은 오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의 미국 내 두 번째 합작공장을 테네시주에 지으며 연합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호주 시라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공급 계약을 맺으며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5년 내 북미 역내에서 양극재 63%, 음극재 42%, 전해액 100%, 핵심광물 72%를 현지화하는 것이 목표로 내세웠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첫 전기차용 배터리 셀·모듈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초기 전기차용 배터리 셀·모듈 생산은 연간 23GWh 규모로 시작해 33GWh로 확장할 전망이다.

정부도 대미 IRA 협의회와 관련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자율 '위험성평가' 가능할까... 노사, 책임소재·규제강화 우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논란

정부, 내년 제재방식 등 개선안 마련

노사 자율에 맡긴 '위험성평가'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지적도 있다. 사측과 노동자 간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차가 큰데다 불법파견 등으로 원·하청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노동계는 "안전보건 관

련 직책만 맡겨놓고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규제·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이라고 밝혀 법 개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정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

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 ◆노동계 "노동자 탓만"...경영계 "자율은 명목뿐, 규제만 강화"

하지만, 노동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설비와 지원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사망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불분명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

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자율보다 처벌·감독 등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안을 주장했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후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으로 확산되자 제재 방식 등 개선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